

제429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제 4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시 2025년9월30일(화)

장소 제5회의장(220호)

의사일정

1. 업무보고

- 가. 기획재정부
나. 보건복지부
다. 고용노동부
라. 금융위원회

상정된 안건

1. 업무보고 2
가. 기획재정부
나. 보건복지부
다. 고용노동부
라. 금융위원회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영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부 위원 출석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지자체 일자리대상 참석을 사유로, 이형일 기획재정부1차관이 지방시대위원회 참석을 이유로, 이스란 보건복지부1차관이 장기요양위원회 회의 주재를 사유로, 권대영 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 위원님들의 금융 현안 금융감독원 업무 협의를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을 요청하여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 간 협의를 거쳐서 이를 허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께서 기획재정위원회 출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 이석을 요청하여 위원장과 간사 위원들 간 협의를 거쳐서 이를 허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윤철 장관께서는 적절한 시각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및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정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문위원회는 총 22인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박명호 교수님과 주은선 교수님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청년 전문가 여섯 명을 위촉하였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양 교섭단체의 간사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간자문위원회 위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특위 활동 시에 민간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 연금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야별, 세대별로 상세히 청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 업무보고

가. 기획재정부

나. 보건복지부

다. 고용노동부

라. 금융위원회

(14시03분)

○위원장 윤영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금특위에서 노후소득 보장 여건 변화와 연금개혁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문성과 높은 식견을 갖춘 민간자문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앞으로 연금특위에서 연금 구조개혁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초·국민·퇴직·개인연금 등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은 OECD 선진국보다 낮은 반면 인구구조, 경제 여건의 변화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제도에 대한 세대 간 형평성 이슈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가채무비율 증가 등 일반 재정 여력은 제약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사적연금의 역할 역시 퇴직연금의 저조한 도입률, 낮은 수익률 등으로 인해 부족한 모습입니다.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과 지속가능성 제고, 사적연금 활성화 등을 핵심 개혁과제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9월 25일 출범한 범정부재정구조혁신TF 등을 통해 연금특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연금특위가 연금개혁을 차질 없이 완결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인대 차관보입니다.

주환욱 경제구조개혁국장입니다.

장문선 재정정책국장입니다.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입니다.

(인사)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윤인대 차관보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기획재정부차관보입니다.

노후소득 보장 여건 변화와 연금개혁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노후소득 보장 여건 변화입니다.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는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국민·퇴직·개인연금 등 다층적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은 OECD 선진국보다 크게 낮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약 31% 수준인 반면 OECD 평균은 약 42% 수준입니다. 이에 더해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 인구구조와 경제 여건의 변화 등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1988년 도입 당시 약 70세였던 기대여명은 84세로 늘어났고 함께 출산율은 1.55명에서 0.75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70년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층 인구가 이를 부양할 생산가능인구를 초과할 전망입니다.

저성장·저금리 등의 거시경제 여건 변화로 안정적인 기금운용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기금 소진 우려 등으로 세대 간 형평성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모수개혁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총지출액이 보험료 수입을 상회하고 기금고갈 이후에는 필요보험료율도 최대 39.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약 4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한편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사적연금의 역할 역시 부족한 모습입니다. 퇴직연금은 영세·중소기업을 기준으로 도입률이 저조하고 타 연금 대비 수익률은 낮은 상황입니다. 개인연금도 낮은 수익률과 일시금 수령 등으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적연금 노후소득 보장과 지속가능성 제고, 사적연금의 보완적 역할 강화 등 과제적에 대한 집중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연금개혁 추진 현황입니다.

기재부는 9월 3일 4대 공적연금 재추계를 포함한 향후 40년 간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고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9월 25일 범부처 합동 재정구조혁신TF를 발족하였고 이를 통해 국회의 연금특위 논의를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에 약 74만 명의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지원 예산을 반영하는 등 지난 연금개혁에서 합의된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 부처와 함께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주요 연금개혁과제들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 사적연금제도개선TF 통해 연내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석 윤인대 차관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88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보험료율 인상으로 2056년 소진 전망이었던 국민연금기금은 최대 2071년까지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대체율 상향과 출산·군 크레딧 확대, 지급보장 명문화는 현 청년세대의 노후소득 및 제도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개혁 목표가 완전히 달성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기금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하는 다층 연금제도를 설계해 나가야 합니다.

보험료 지원, 크레딧 등 청년 지원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저소득층과 현세대 어르신들의 실질소득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과 미래세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 노력을 강화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제도에 대한 신뢰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연금개혁은 국민적 공감대 위에 국회의 치열한 논의 과정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혁의 성과를 이어 22대 국회 연금특위에서도 개혁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새로 구성되는 민간자문위에서도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부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영주 연금정책관입니다.

(인사)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연금정책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 진영주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진영주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 국민, 퇴직, 개인연금 등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어 18세에서 59세 사이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월소득의 13%를 납부하고 은퇴 전 평균소득의 43%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적립 규모는 작년 말 기준 1213조 원입니다.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최대 34만 원을 지급하며 676만 명이 수급하셨습니다.

2쪽, 연금개혁 내용 및 평가입니다.

모수개혁으로 보험료율이 9%에서 2033년까지 13%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도 올해 41.5%에서 내년 43%로 상향됩니다.

크레딧은 출산의 경우 첫째아부터 12개월로 확대되고 군 복무는 현행 6개월에서 내년 부터 12개월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국가의 지급보장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고 보험료 지원 대상도 저소득층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최대 2071년으로 연장되었으나 기금의 장기적 유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안정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소득대체율 인상, 크레딧, 보험료 지원 확대로 청년·저소득층의 노후소득이 강화되었으나 안정적 노후 보장을 위한 보장성 확대가 필요합니다.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제도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는 것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3쪽,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금년 연금개혁 성과를 이어 지속가능성 및 노후소득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연금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첫째, 지속가능성 확보입니다.

수익성이 우수한 주식·대체투자를 확대하고 우수 운용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해외사 무소 기능 강화 등 인프라 개선을 통해 기금 수익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고 지원의 경우 청년·저소득층의 가입 기간 확보 지원을 우선 고려하고 기금 재정 안정을 위한 국고 지원은 재정 부담, 지원 효과 등에 대한 분석과 함께 연금특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의 실질 노후소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하는 청년에게 첫 보험료를 지원하고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연금 수급 시가 아닌 출산 시에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여성들의 수급권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가입자를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내년부터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기초연금 내 불합리하다고 지적된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과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대 형평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연금 수급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미래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세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외에 쟁점이 다양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인 과제는 연금특위에서 추가 논의하고 의무가입연령 상향도 법적 정년연장 등 고령자 고용 여건 변화와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범부처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후속 개혁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금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석** 진영주 연금정책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창준 고용노동부차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존경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퇴직연금은 2005년 도입 이후 빠르게 성장하여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이 431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43만 개 사업장, 675만 명의 근로자가 가입하여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도입률은 23%에 불과하고 1년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은 제도 적용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불액 중 상당 부분이 퇴직금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여전합니다.

또한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익률 그리고 일시금 수령 선호 등으로 인해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양적성장을 넘어 퇴직연금이 연금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는 도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퇴직연금 도입의 단계적 의무화,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 활성화, 디폴트옵션 개선과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등 제도의 혁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을 맞이하여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오래 연금을 납부하고 영향을 받을 청년세대도 함께 참여하여 노동자, 사용자, 청년이 주체가 되는 논의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이는 20여 년 전 퇴직연금 도입을 위해 진

행했던 노사정 대화 이후 처음입니다.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퇴직연금의 주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그간의 20년을 돌아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 자체가 제도의 미래를 더욱 든든히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퇴직연금은 노동자의 평생 노동이 담긴 땀의 가치이자 노후소득을 지켜 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정부는 퇴직연금이 모든 사업장에 뿌리내리고 노사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연금개혁 논의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고용노동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입니다.

최관병 근로기준정책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노동정책실장이 퇴직연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입니다.

퇴직연금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먼저 퇴직연금 현황 및 평가입니다.

첫 번째로, 가입 현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가입되어 있으며 영세중소기업의 가입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2024년 말 총 적립금액이 431조 7000억 원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 중에 있습니다. 2050년경에는 국민연금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도입률은 약 27%로 특히 규모가 작을수록 도입률이 낮아 30인 미만 사업장은 23.2%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연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적립·운용 측면에서는 수익률이 낮은 저축에서 투자로 점차 전환되고 있지만 여전히 수익률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퇴직연금의 연간 중도해지는 15조, 중도인출은 2조 4000억으로 주택 구입이나 임차비에 대한 활용이 많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4년 말 수익률은 4.77%로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최근 자산운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실적배당형 비중이 전년 대비 4.6% 증가했으며 특히 디폴트옵션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10.7%로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는 성과를 보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입 근로자나 사용자는 원리금보장 상품 중심으로 선택하고 운용하고 있어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령 단계에서는 일시금보다는 연금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해 보면 불과 4년 만에 연금수령 계좌 비중이 약 4배 증가했고 연금수령 금액 비중은 2배 증가하는 등 개선세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연금제도의 특성상 이러한 개선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퇴직연금의 가입·적립·운용·수령 단계별로 개선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입 단계에서는 도입·가입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임금체불 방지, 노후소득 보장의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순으로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퇴직연금 도입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의 행·재정적 부담을 덜어 주고 기금형 모델 확산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100인 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중퇴기금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사각지대에 있었던 1인 미만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제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립·운용 단계에서는 수익률 개선을 통해서 더 많은 퇴직연금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도해지 등 중도인출의 유인을 축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 활용 대신 담보대출을 활용하도록 상품 개발, 한도 확대 등 개선안을 시행하고 저소득근로자 등 대상별로 추가 적립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적립금 운용 방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원리금 보장 상품의 편중을 신속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AI를 활용한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통해서 투자일임제도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가입자의 선택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금형 도입을 적극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수급권 보장을 전제로 기금형의 도입 성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수급권 보장이 용이한 부분부터 벤처투자를 허용하고 퇴직연금 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적극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들 간의 성과와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령 단계에서는 일시금보다는 연금을 더욱 많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수령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연금 수령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 개발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퇴직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구체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이억원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각계 전문가분들로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이 확정된 만큼 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사적연금의 개혁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사적연금의 수익률 및 가입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 등 연금운용에 신기술을 도입하고 운용상품 간 비교공시를 확대하여 수익률 제고를 유도하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우리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령층이 보유한 부동산을 안정적인 노후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금융위원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민우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자본시장국장이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민우 개인연금 및 주택연금 개선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우선 개인연금 개선방향입니다.

개인연금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등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94년도에 도입되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3층 연금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의무 가입제도로 운영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과는 달리 개인연금은 노후소득 보장, 절세효과 등을 위한 자발적 납입금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대비 적립 속도는 더딘 상황입니다. 현재 24년 말 기준 388.5조 원으로 3층 연금체계 중에서 약

19%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로 개인연금은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금융상품으로서 연금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연금저축과 기타 상품으로 구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제적격 상품인 연금저축 기준으로 운용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연금저축 규모는 180조 원으로 지난 5년간 25.6% 성장하는 등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입자는 764만 명으로 전년 대비 42만 명이 증가하였고 수익률은 3.7%로서 전년 대비 0.9%p 하락하였습니다. 운용 방식 차이로 상품별 수익률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령액은 2024년 중 5.6조 원으로서 전년 대비 0.5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방향입니다.

현행 3층 연금체계 구조하에서 공적연금의 구조적 한계를 감안할 때 사적연금의 보완적 기능이 중요하나 현재 공적연금 대비 수익률·가입률 등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가입률·수익률 제고 등 사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운용규제 개선 및 사업자 간 경쟁 촉진을 통한 수익률 제고 방안입니다. 2025년 3월부터 출시한 로보어드바이저 운영 실적을 토대로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확대하고 정식 제도화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퇴직연금 갈아타기 서비스의 단계적 확대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개인연금·퇴직연금의 불합리한 운용규제를 지속 발굴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강화 방안입니다.

장기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서 종신수령 시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현재 2025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개인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 방안도 지속 강구하겠습니다.

셋째, 사적연금 교육·홍보 강화를 통한 가입률 제고 유도입니다.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모집인 교육 강화, 금융협회 등을 통한 사적연금 캠페인 실시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연금 개선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액을 수취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령층이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자산을 유동화하여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국민·퇴직연금과 함께 다층 연금체계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간 가입자 연령 확대, 주택가격요건 완화 등 가입 가능 대상을 꾸준히 확대하여 왔으나 아직 가입률이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연금 가입 유인이 하락한 것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검토 중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월지급금 산정방식 개선입니다.

계리모형상 주택연금의 주요 변수를 다소 엄격하게 가정하여 보증료 대비 주택연금 월지급액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주금공의 중장기 기금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리모형을 재설계해서 주택연금 월지급 금액을 합리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우대형 주택연금 확대입니다.

초저가주택 보유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금액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시가 2.5억 원 미만 주택에 월지급 금액을 최대 18.4% 추가 지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8억 원 미만의 초저가주택에 대해서 최대 25%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셋째, 실거주 예외 사유 확대입니다.

지방인구 감소, 고령층 지방 이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실거주 예외사유에 귀촌, 인구소멸지역으로의 이주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타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주택연금 활성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시는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1차 질의시간은 간사님들과의 협의에 따라서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 광명을 김남희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재부차관보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보님, 국민연금에 대해서 청년들의 불안이 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제일 큰 이유는 기여한 만큼 나중에 적정하게 국민연금에 대한 노후소득이 보장될지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세대간 부담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불만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남희 위원** 이번 국민연금 모수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기가 다소 연장되기는 했지만 기금이 소진되면 미래세대가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되거나 막대한 보험료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맞습니다.

○**김남희 위원** 물론 이번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국가지급 의무화가 법에 명시돼서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되는 일은 없지만 미래세대가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적정한 국고 투입을 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고 청년세대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청년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청년들의 불안을 더 증폭시키는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차관보님, 지난 연금개혁 과정에서 청년 노후소득 보장 강화하기 위해서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지원을 확대했지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크레딧을 확대한다고 하고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래 세대에 떠넘긴다면 과연 그것을 청년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출산크레딧은 출산아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경력이 단절되거나 가입기간이 줄어든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돕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출산크레딧이 출산 시점이 아니라 연금을 실제 수령하는 시점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 중 보통 남성이 더 나이가 많고 임금이 높은 경우가 많아서 출산크레딧 98% 남성이 받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으로 가입기간이 단축된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용 시점을 출산 시로 당기고 지원을 출산 시에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자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출산크레딧 지원을 출산 시로 당기게 되면 재정도 절감할 수 있어요. 출산 시에는 보험료만 지원하면 되는데 실제 수령할 때에 지급하면 받게 될 연금액을 지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산크레딧 적용 시점을 출산 시로 당기게 되면 일반재정과 국민연금기금을 합하여 무려 42조나 절감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관님, 청년세대의 노후소득 강화하고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돕는다는 출산크레딧의 취지나 이런 42조 재정 절감을 생각하면 출산크레딧 적용 시점을 출산 시로 앞당기고 현재 세대가 보험료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랑 생각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우리 세대 간의 불평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본질적으로 국민연금 내에서 보수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접근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재정 절감 말씀을 드렸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번에 우리가 올초 연금개혁을 통해서 정부가 연금재정에 대해서 지급보장 명문화했기 때문에 사실 사후적으로 부담은 큰 차이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김남희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42조 절감된다고 제가 자료 보여 드렸잖아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그렇게 한쪽은 재정이지만 한쪽은 또 국민연금이 부담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전체가 합쳐지면……

○김남희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했는데 그때도 잘못 이해하시더니 이번에도 제대로 이해 못 하고 오셨어요. 똑같아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맞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계산으로는……

○김남희 위원 제가 지난번에 질문드렸을 때도 그 내용 제대로 파악 못 하고 대답하시

더니 지금 다시 똑같은 대답을 하세요. 일반재정이랑 국민연금기금 합해서 42조 절감할 수 있다고 자료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이가 있으면 위원님 사무실로 가서……

○김남희 위원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얘기했는데……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저희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와서 똑같은 답변을 하시면 어떡해요, 기재부가?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저희랑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김남희 위원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42조 절감할 수 있는 게 객관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 자료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저희 계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거는 계산 잘못하신 거고요.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 못 하고 계신 겁니다.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어느 쪽이 차이가 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맞춰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김남희 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료를 지금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관보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오신 거예요, 기재부에서 지금?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저희 계산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김남희 위원 큰 차이가 없다니, 42조가 어떻게 큰 차이가 아니예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그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저희가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42조가 왜 차이가 안 나요? 그걸 설명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시간을 주시면 좀 더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지금 설명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김남희 위원 42조 차이가 안 난다는 거를 설명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지금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윤영석 별도로 한번 분석을 해서 서로 비교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남희 위원 아니, 42조 차이 난다는데 왜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보시라고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행체계하에서 우리가 3 대 7, 출산크레딧만 말씀을 드리면 현행체계에서 사후지급으로 계산하면 저희가 26년부터 93년까지 총소요는 131.1조 원이 소요가 되고 정

부가 30% 부담한다고 하면 48.3조, 국민연금이 70% 부담하면 111.8조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출산크레딧을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먼저 지원하게 된다고 그러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전적 지원으로 인해서 34.9조 원이 되기 때문에 일부 10조 원 이상 정부 소요는 좀 축소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81.4조 원이 소요가 돼서 표면적으로는 국민연금 지원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적립분이 국민연금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44.8조 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총소요 161.1조 원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지금 그거는 잘못 이해를 하시는 건데요. 지금 그거는 잘못 이해하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위원장 윤영석** 김남희 위원님.

○**김남희 위원** 사전지원을 하게 되면 보험료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 지원한 걸로 운용을 해서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후지원을 하게 되면 사전지원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을 지원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금액이 훨씬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42조 절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훨씬 올라가는 부분은 또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연금에서 부담을 하든 국가에서 부담을 하든……

○**김남희 위원** 아니요. 지금 국민연금기금이……

○**위원장 윤영석** 김남희 위원님.

○**김남희 위원** 예.

○**위원장 윤영석** 회의 진행상 조금 복잡한 거는 수치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추후 질의하실 때 다시 질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남희 위원** 아니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기재부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그리고 제대로 설명을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필요하면 저희가 위원님 사무실 찾아 뵙고 설명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한번 설명을 드리세요. 아니, 지금 설명을 별도로 드리세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그러면 담당 국장 가서 설명 좀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 아니요.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기금이 운용이 돼서……

○**위원장 윤영석** 김남희 위원님, 회의 진행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보충질의할 기회 다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하면 나중에……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잠깐 간단하게 30초만 하겠습니다.

기재부 차관보님이신가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차관보입니다.

○**남인순 위원** 차관보님, 지금 김남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인용을 해서 출산

크레딧을 사전에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소요비용이 전체 국가재정으로 봤을 때는 적게 든다고 하는 데이터를 그동안 계속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회의를 할 때 아마 그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만일 새로운 데이터와 근거 자료를 갖고 있으면 여기 전체 연금특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저희 내부자료이기 때문이에요.

○남인순 위원 추계를 했던 근거 내용도 있으신 거지요? 자료를 지금 빨리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지금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전체 위원들한테.

○남인순 위원 예, 전체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보충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남경철 복지예산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테크니컬하게 저희가 국민연금연구원하고도 이야기를……

○남인순 위원 자료를 달라는 건데 설명을……

○오기형 위원 아니, 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하셔야지요. 그냥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장 윤영석 모든 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배포해 주시고 이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 그러면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연금특위가 열려서 질의를 처음하는 날이라서요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또 여야 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은경 장관님, 지난번에 저희가 모수개혁을 통해서 몇 가지 부분적으로 개혁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보험료율이 오르다 보니까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부분이 중요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이것이 반영이 됐나 하고 제가 살펴보니깐 상당히 우려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존에는 납부재개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었는데 납부재개자라고 하는 요건을 없애고 월소득 기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했을 때는 기준소득월액이 10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대를 하면서 이거를 80만 원으로 낮췄어요. 상당히 꿈수 같이 느껴집니다, 사실은. 제가 이따 기재부한테도 여쭙볼 것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지원대상 기준을 80만 원 미만으로 축소를 하다 보니까 저소득 지원 강화라는 사업의 목적이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결국은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이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원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소득신고를 하향화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의 A값이 줄어서 결과적으로도 급여 수준이 악화되는 결과를 낳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최소한도 103만 원이라는 기준은 뭐냐 하면 농어민 보험료 지원 기준소득월액입니다. 이 수준이라도 맞춰 주시든지 80만 원으로 낮추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2024년도 지역가입자의 평균이 146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상향을 하든지. 지금 80만 원으로 낮춰 났으니까 최소한도 103만 원까지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소요 예산도 받아 봤습니다. 소요 예산도 받아 봤는데 이것을 103만 원인가로 맞출 경우에는 현재 예산을 하신 거는 한 800억인가 900억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를 103만 원 미만으로 상향할 경우에는 약 4500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장관님, 체크해 보셨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는 중위소득 80% 기준으로 80만 원 했을 때는 824억 정도로 내년 편성돼 있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한 100만 원 정도로 하면 1553억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추계는 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기준에 했던 기준만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재부 차관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타당성 있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사업 성격이 이전에는 납부예외자를 납부하는 쪽으로 유인하는 성격이 강했다고 보면 이번에는 그런 유인보다는 저소득층이나 일반적인 연금지원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대상이 과거 납부유예자를 유인할 때는 19만 명 정도에서 이번에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72만 명, 73만 명 정도로 대상자가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이 약 4배 수준이 늘어난 측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남인순 위원** 지원대상은 좀 늘어났는데요. 그동안 사실 지원받았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103만 원이라고 하는 기존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낮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전체적으로 평균 A값이 낮춰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기준소득월액이 103만 원 정도까지 해야지 그래도 이것이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 기존의 팔백 얼마에서 1530억이면 추가로 한 600억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보건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한 600억……

○**남인순 위원** 그거는 계산을 해 보시고요.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님, 퇴직연금에 대해서 기금화 하자는 방향이 있는데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기금화를 할 경우에 어떤 모양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기금화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기금에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인 정부 입장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금화의 모습에 대해서 노동계라든지 전문가들 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그 방안을 결정하고 나면

그전에 연금특위 위원님들하고 보고드리면서 연내에는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연내에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남인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진보당 전종덕 위원입니다.

방금 전 남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저도 똑같이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A 값을 너무 낮게 잡아서 오히려 소득대체율 인상효과가 전혀 없고 나중에 급여를 받을 때 너무 적은 금액으로 받기 때문에 빈곤 해소라든지 소득 보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의 기본 평균인 146만 원으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것이 안 되면 남인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최소한 올해 기준인 103만 원 수준으로 맞춰야 그나마 소득 보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가입대상자는 확대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금액이 23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차액이 발생하는 만큼의 대상자가 사각지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금액을 인상하는 것이, 인상이라기 보다는 기존 현 금액으로 맞추는 거지요.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도 적극적 검토를 해서 복지부하고 협의하에 현행 기준 금액으로 맞추어서 사각지대 해소하고 소득을 그나마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재부 차관보님.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저희가 계속 그 고민입니다. 한정된 자원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노인들의 빈곤율도 낮추고 하는 부분에 대해 계속 고민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납부유예자 이런 분들을 납부로 유인하는 책으로 쓰는 게 사실은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 소득 보전 개념으로 가면 우리가 사업을 첫째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소득 파악이 정확히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80만 원 수준으로 시작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이것 낮춘 거예요. 기준을 낮추었고 최하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대상을 넓혔을지 모르는데 103만 원을 기준으로 했던 대상자와 80만으로 낮춘 대상자 사이의 갭을, 또 그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 대상이 얼마나 차이가 나고 금액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리고 복지부장관님, 내년부터 보험료율이 오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0.5% 오릅니다.

○전종덕 위원 0.5%씩 오르는데요.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겁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등의 보험료 경감을 위해서 인상분만큼의 일부라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인상분 보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역가입자 저소득층에 대한 가입 부분만 지금 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한번…… 지금 보험료율이 앞으로 0.5%씩 해서 오를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소득층들이 보험료 부담이…… 지금 A값도 낮춰 놓고 그리고 또 보험료분은 인상을 하게 되면 그 부담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한 일부, 최소한 25%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는 전체 보험료의 50%이기 때문에 인상한 부분도 그 50%에 반영이 되기는 합니다. 좀 더 다른 방안이 있는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다양한 방안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찾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복지부장관님, 국민성장펀드 150조 조성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연기금에서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전혀 처음 듣는 얘기이고 이런 발표를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연기금을 어쨌든 출자를 해야 되니까 관련 절차와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 봤더니 투자를 검토한 바도 없고 출자 참여를 요구받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제가 답을 들었어요.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는 국민연금에서의 출자계획이나 이런 게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혹시 계획이 있다는 뜻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것은 전체 국민성장펀드를 어떻게 조성할 건지에 대한 세부계획이 검토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논의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는 관련은 없습니다.

○**전종덕 위원** 아직 마무리를 못 했는데……

○**위원장 윤영석** 1분만……

○**전종덕 위원** 50조면 국민연금의 4% 수준입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 아니고, 아무리 정부투자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기금이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또 기금의 독립성이나 또 이 분야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게 손실 나면 그 피해는 다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하는데 있어서도 절차와 과정도 제대로 거쳐야 하고 이게 적절한 건지, 기금의 독립성은 침해하지 않는지, 전문성이 타당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없이 정부가 투자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그냥 투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국민연금 투자 원칙에 따라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전종덕 위원** 기금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는 투자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아무리 정부투자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많은 종합적인 검토하에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을 진행 과정에서 철저히 주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준 위원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금특위의 주요 논의 대상이 연금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정안정화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우재준 위원 그러면 재정안정화 조치에 대해서 혹시 보건복지부 어떤 대안들을 갖고 있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저희는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기금의 수익률을 가장 높여서 기금을 연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

○우재준 위원 수익률 말고 방법 없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것 말고는 현재는……

○우재준 위원 기존의 정부들이 수익률을 높일 수 없어서 안 한 건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최대한 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노력을 더 하겠고요. 그리고 국고 지원을 좀 더 강화하는 부분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국고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할 거지요? 언제부터 지원할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국고 지원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크레딧 강화하는 부분이나……

○우재준 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국고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크레딧 지원은 받는 사람한테 돈을 더 준다는 거고요.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국고 지원 언제부터 할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는 저희가 한 1조 정도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도……

○우재준 위원 전체 기금이 얼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1221조 정도 됩니다.

○우재준 위원 그러면 0.09%쯤 되나요? 그러면 그 정도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것을 좀 더 늘려 나갈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재준 위원 얼마나 늘릴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말씀드리기에는……

○우재준 위원 재정안정화 관심이 있는 것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말씀드린 대로 수익률 높이는 부분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재준 위원 재정안정화하는 방법은 세 가지겠지요. 낼 사람이 더 내고 받는 사람은 줄이고 그다음에 있는 돈의 수익률은 올리는 겁니다.

낼 사람은 더 났지요? 더 내는 것으로 했지요? 청년들이 더 내는 것으로 희생했습니다. 9%에서 13%로 보험료율을 올렸지요.

수익률 올리는 것, 할 수 있다고 제가 믿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나중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받는 돈 줄이는 것 없이 재정안정화가 가능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지난 정부에서도 아마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우재준 위원 연금액 받는 돈을 줄이는데……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러니까 어쨌든 노후소득 보장도 저희의 목표이기는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재준 위원 연금 최다액 받는 분이 얼마 받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제가 최고 금액은 지금 기억이……

○우재준 위원 300만 원 넘으시지요, 월에? 부부 간 합쳤을 때는 527만 원 정도 받는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여유 있는 분들은 줄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연금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수개혁……

○우재준 위원 아니, 상한을 좀 두어서 한다면 아니면 연금소득세를 좀 올린다는지 하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연금 수령 나이를 좀 올릴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 그렇게 하는 나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다양한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구조개혁을 하는 연금특위에서 조금 더……

○우재준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입장은 뭐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연금특위에서 논의할 때 저희가 그런 근거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재준 위원 이재명 대통령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재정안정화 방법에 대해서 본인의 철학은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현재는 정부에서는……

○우재준 위원 123대 국정과제에도 1개도 없어요. 재정안정화 방법에 대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국가재정 역할 강화’ 한 줄 끝입니다.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 세금은 누가 낸다는지, 언제부터 지원한다는지 1개도 모르겠어요.

지난 연금개혁에 대해서 청년들이 분노한 것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알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런데 왜 오늘 인사말씀에는 ‘이번 연금개혁은 국민적 공감대 위에 국

회의 치열한 논의 과정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청년들이 공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청년들이 더 많이 내는 것과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좀 더 낮은 부분도 있고요. 또 소득대체율을 높인 부분도 앞으로 가입 기간이 긴 청년들에게 좀 더 많이 제공되는……

○우재준 위원 나중에 기금이 소진되는데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재준 위원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기금이 없는데 뭘로 받으라는 겁니까, 그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러니까 현재의 모수개혁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좀 더 많은 부담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재준 위원 일단 받는 사람들이, 기금 소진이 너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받겠다는 사람들이 더 받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년들이 왜 분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말씀드린 대로 당장에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것과 기금 소진을 막지 못했다는 그런 문제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개혁을……

○우재준 위원 그러면 기금을 지킬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그런 재정안정화는 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의 안정화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구조개혁이나 다른 부분들에 대한 개혁을 같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예시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연금특위와 같이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윤영석 예.

○우재준 위원 저희 특위의 처음 시작은 재정안정화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연금개혁이 부족했다는 점 때문에 보험료율은 올렸지만 나머지 재정안정화하는 방법은 좀 부족해서 그래서 이 연금특위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시지만 향후에 논의를 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담아 오신 것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뿐 아니라 조만간 다시, 저는 다음 주도 좋고 심지어 내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이재명 정부의 재정안정화 조치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담아 오시면 조만간에 다시 열어서 이 부분의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석 우재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연금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는 결국은 노후소득의 보장 강화와 함께 이러한 지속가능성, 재정안정화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해서 좀 더 이러한 내용을 보강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배 위원** 고용노동부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임금체불을 막고 또 노동자들의 은퇴소득을 강화하기 위해서 퇴직연금 의무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도 아시는 것처럼 시중에 반대 여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내 퇴직금조차도 국민연금처럼 되어서 내가 중간에 회사를 이직하거나 또는 집을 사서 급히 돈이 필요한데, 목돈이 필요한데 못 쓰는 것 아니냐, 중도인출까지 다 막히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것은 분명히 오해이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다만 이런 퇴직연금화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을 강조하다 보니까 일각에서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상하게 설명하면서……

○**박홍배 위원** 저는 노동부 차원에서 이것 대국민 홍보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저희가 이번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노사정에서 TF 논의를 하면서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 그다음에 정부의 입장 등을 SNS나 이런 홍보하고 아니면 토론회든지 하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계속 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 국민들께 이 부분 잘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말 임금체불액 2조 448억 원 중에서 약 40%가량이 퇴직금이었지요. 노동자들이 일하고도 임금을 못 받고 퇴직하면서 퇴직금도 못 받는 현실, 퇴직연금 의무화가 일정 부분 저는 해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에 따라서 사용자의 유동성 부담 증가 부분이 걱정이 되시고 고용노동부에서 몇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보고자료에 제시하신 신규 취업자에 한해서 의무 도입을 한정하겠다고 하신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잘못되어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고 경영이 악화된 이후에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퇴직금이 체불되게 되었을 때 기존 재직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신규 취업자, 신입 직원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그 조직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도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알겠습니다.

○**박홍배 위원** 전 정부 때부터 노동부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자문단 회의라는 것을 개최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논의됐던 사항들이 외부로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나 국민에게 공유하고 특히 국회와 함께는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맞습니다. 올해에 저희가 자문단 회의를 했는데 주로 수

탁자 책임이라든지 경쟁체계 그다음에 전략적 자산 등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앞으로 연금특위 논의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 장관께서는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해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공적 기관에 수탁하는 방법이 안정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더 낫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퇴직연금공단 설립을 염두에 두신 발언일까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일단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퇴직연금을 기금화할 때 운용주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국회 법안이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크게 대별해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공적인 기관을 설립하자는 법안도 있고 기존의 연금사……

○박홍배 위원 답변만 간략하게, 그래서 퇴직연금공단 설립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그래서 그 부분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장관님이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말씀 주셨으나 최종적으로 정부 입장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운영석 위원장, 김미애 간사와 사회교대)

○박홍배 위원 정은경 장관님, 조금 전 기금형 퇴직연금 관련해서 들어 보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박홍배 위원 국민연금에 위탁하자 이런 의견이 일부 있습니다.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퇴직연금 기금화하고 수익률을 높이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고용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고용부의 의견을 좀 더 듣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이 더 수익률을 올리려고 노력하시고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확보 또 수익성이 우수한 자산을 확대하고 기금운용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하셨지만 국민연금의, 특히 기금운용본부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부분들이 제대로 잘 이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비판의 여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하신 정부의 업무보고가 제가 느끼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금이라는 게 1%만 수익률이 더 높아져도 우리 국민들의 노후 삶 그리고 국가의 재정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 더 신경 쓰시고 좀 더 강화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기금운용 인력에 대해 더 확충을 하는 부분과 처우 개선해서 좋은 운용인력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투자 다변화를 통해서 좀 더 수익률이 높은 부분에 대한 투자 비율에 대한 것을 좀 조정하는 거나 아니면 주로 해외사무소의 역할을 좀 강화해서 전체적으로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금공단이란 저희가 같이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홍배 위원 저는 전체적인 국민연금, 특히 기금운용의 의사결정 구조, 지배구조 그리고 정보의 공개성 등 근본적인 체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좀 신경 쓰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운영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체 투자에 대한 ESG 책임자를 강화하는, 책임 수탁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애 박홍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평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2대국회에 와서 다충연금이 처음에 개념이 흐릿해서 이걸 좀 모아 가지고 재차 성과를 했는데 오늘 하여튼 일단 다충연금이라는 그림은 정부도 다 모아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좋게 평가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충연금을 항상 들고 다니셔야 되고, 국민 수요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부 따로 고용부 따로 금융위 따로가 아니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박수민 위원 자동안정화장치, 재정 안정화 장치라 해도 좋고 좋은데, 이걸 빼 놓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자료에 제가 보니까 비포·애프터로 스리슬쩍 빠져 있는데 이것 큰 일 날 얘기입니다. 자동안정화장치라는 것은 물론 인구나 그런 것에 비해서 줄어들면 덜 주는 그런 슬라이딩 장치이기 때문에, 한데 이것은 누구를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이 한 번 흔들리면 나라 흔들립니다. 유럽에서 연금개혁이라는 게 늦어 가지고 나라가 흔들흔들하는데 우리나라, 그래도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모수개혁이 급해서 저희도 합의를 해 드렸어요, 총액이 깎일까 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자동안정화장치를 넣어야 지속가능성이 생기면서 청년세대의 마음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제일 오래 내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20대가 제일 오래 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동안정화장치 빼고 다니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국비 지원 쉽게 툭 써 놓으셨는데 이것 이렇게 쉽게 써 놓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약간 상상력이기는 한데 기재부차관보님께 여쭙 드릴게요. 국비지원 잘못 써 가지고 연금 채무까지 국가채무로 잡히면 D2나 D3 기준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국가신용등급 흔들릴 수 있겠지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가능성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이것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크레디트 같은 것 몇 개에 대해서, 이게 인센티브 장치에 대해서도 재정도 좀 분담한다 이런 정도면 모르겠는데 재정을, 국고지원을 1년, 2년 이렇게 연년세세에 한다 이렇게 되면 국가채무 기준 자체가 달라져서 복지부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아마 국정과제 논의하면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이것 절대 쉽게 써 갖고 다니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은 국민성장펀드 그것 아마 논의가 좀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반드시 저는 국민연금에 국민성장펀드가 투자를 해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톱다운(top-down)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보텀업(bottom-up)으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투심이 있어요. 거기서 수익

성을 판단해 가면서 하면 합법적인 거고 위에서 꺾 주면 불법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박수민 위원 이것은 실정법 위반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니까 엄격히 이행하시고요.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렸고.

고용노동부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박수민 위원 퇴직연금 해외 사례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지금 공부, 스터디 나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대충 다 되셨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지금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401K 같은 것 공부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과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퇴직연금 회사별로 다 기금을 모아 왔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국가공단으로 모아 놓는 것은 제가 들어 본 일이 없어요. 국민연금은 돈을 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연금기금에 모아서 공단이 운영하면서 민간에, 미래에셋에 맡기든 삼성증권에 맡길 수 있는데 현대차에 다 모아 있고 삼성전자에 모아 있고 중소기업, 작은 회사에서 풀링(pooling)을 해 준다? 이건 가능한 얘이에요.

그런데 공단을 세워 갖고 현대차에 있는 적립금을 옮긴다? 그러면 현대차가 운영하는 것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것 무슨 보장을 할 거며 그것 공단에서 운영하는 데 1년에 수백억 들 수 있습니다. 1000억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진짜 기함을 했는데 해외 사례를, 이것은 순수하게 대통령이 공적으로 한다 하셨다 하더라도 그건 인풋이 잘못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고용노동부 책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사례 철저히 조사해서 이것은 실수 없이 하십시오. 이것은 상상력으로 했다가는, 그럴 일이 아니에요. 외국에서 퇴직연금을 공단을 세워서 가져온 사례가 있는지, 성공 사례가 있는지 우리나라에 있을 때 장단, 특징이 뭔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고하셨듯이 퇴직연금은 시장에서 순조롭게 발전하고 있는 과정 같아요. 수익률도 최근에 좋아지고 어떤 연금화도 되고 있고 알겠지요?

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끝나면 따로.

○위원장대리 김미애 위원장과 민주당 오기형 간사께서는 기재위 상임위가 있어서 잠시 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순서가 다가와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은경 장관께 질의합니다.

지금 연금개혁 논의가 왜 시작됐고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첫 번째 목적은 노후소득을 더 강화하는 부분일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재정 안정화 방안 그리고 또 세대 간 형평성 부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애 장관님, 이 연금개혁 논의가 국회에서 오랜 기간 이루어진 것은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애 모수개혁이라고 하지만 저는 모수조정이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율을 9%에서 4% 올리는 데 몇 년 걸렸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몇 년간 올린 것을……

○위원장대리 김미애 몇 년 걸렸습니까, 이것 4% 올리는 데?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18년, 16년……

○위원장대리 김미애 17년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연도를…….

○위원장대리 김미애 98년에 9%로 딱 묶였다가 17년 만에 올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동안에 많은 갈등이 있어서……

○위원장대리 김미애 아니, 요약을 하셔야지요. 이것 업무보고 받으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위원장대리 김미애 연금개혁을 복지부에서 주되게 추진해 왔던 사람이 퇴직한 이기 일 1차관과 지금 1차관인 이스란 차관입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위원장대리 김미애 잘 설명을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받으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위원장대리 김미애 그런데 왜 그건 몰라요?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된 게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던 연금 소진 시기가 몇 년으로 추계됐기 때문입니까, 당초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당초에 2051년……

○위원장대리 김미애 모르잖아요. 56년입니다. 55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56년이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제가 숫자를 잘 기억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소진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춰야 된다. 4.5%를 기준으로 하면 8년 늦춰지는데 오늘도 장관께서는 보고할 때 2071년으로 늦춰졌다고 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준을 정할 때는 기준 제시하는 퍼센트 이것도 똑같은 걸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때 달라요. 잘못 말씀하신 거잖아요. 보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최대한으로 했을 때……

○위원장대리 김미애 4.5%로 하면 64년인데 5.5%로 하니까 71년, 이때는 또 71년을 언급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눈속임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금개혁은 연금의 재정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 정도는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노후소득 보장이 앞에 옵니다.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 보셨습니까, 국회에서 이번에 합의한 것?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위원장대리 김미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연금재정의 안정이에요.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 안정화 조치 및…… 당초에는 이게 재정 안정화 조치가 아니라 자동조정장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재정 안정화 장치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 보고 받으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위원장대리 김미애 그런데 왜 다른 말씀 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제가 아까 두 가지 목적이……

○위원장대리 김미애 가장…… 그러면 오늘은…… 그다음에 우리가 이 논의 과정을 한

번 돌아가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당초에 국민의힘은 오늘도 다 부처가 나오셨잖아요. 그렇듯이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서 해야 된다고 해 갖고 민주당은 아니다. 연금 기금 소진 시기를 단축시키는데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 이것만 빨리 좀 하자라고 해서 그래서 한 게 보험료율 4% 올리는 데 18년이 걸렸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해서 소득대체율도 28년까지 40%로 맞춰놨는데 이것을 다시 3% 올렸다는 말이에요. 그때 국민의힘은 2030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시다. 그래도 왜 했냐 하면 소수당으로서 이때 아니면 보험료율 올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정말 국가적인 과제기 때문에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합의를 했고 그다음 바로 이어서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재정 안정화 조치는 국회특위를 구성해서 하자라는 게 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특위가 구성됐습시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셔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은 물론이고 기재부, 고용노동부, 금융위 어디에도 거기에 방점은 없고. 아까 박수민 위원이나 우재준 위원이 질의했는데 스리슬쩍 이게 바뀌었어요, 방점이. 이것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2030이 이번에 연금개혁이라고 했지만 연금계약이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한 것은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애 20대, 30대가 반대 의견이 60% 넘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는 없어요. 인기 없는 것은 하려고 하지 않고 인기 없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면 우리가 무책임한 거라는 말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지난번에 어렵게 된 모수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 소진 시기가 좀 더 늦춰진 성과는 있었지만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은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이런 민간이나 공공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 보장을 하면서도 재정 안정화 방안을 찾겠다라고 해서 연금특위가 만들어진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원장대리 김미애 그러면 이재명 정부안을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재준 위원도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정부는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뭘 하겠다는 것을 제안을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정부도 그런 방안을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연금특위에서도 전문가 자문위원회도 구성이 됐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또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그런 방안들이,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여러 가지 자료나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재준 위원 데드라인을 좀 알려 주시지요, 이재명 정부안을 언제까지 만들어 올리.

○위원장대리 김미애 지금 위원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지금 사실은 연금특위가 구성이 됐지만 실질적인 회의라고 할 만한 건 오늘 처음입니다. 그렇지요? 너무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아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안은 언제 나올 수 있습니까? 데드라인을 말씀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저희도 장기적인 그런 재정 안정화 방안은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 수렴이나 아니면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산출을 할 필요가 있어서 시간이 좀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애 우리가 여당일 때 민주당은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빨리 정부안 내놓으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위원장대리 김미애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김미애 간사, 윤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영석 상임위가 있어 가지고 좀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오기형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몇 가지 중 있는데 개괄적인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싶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재정 안정화 방안 이야기하셨는데 전체적인 재정 안정화 방향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논의를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늘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당분간 자문위원회에 함께 계시는 전문가들 통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같이 저희들도 받아 보고 그런데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TF를 꾸리셨으니까 나름대로 또 준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성과물을 가지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제대로 활동하니까 그 시점도 일정 정도 일정의 여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작정 미루자는 것은 아니고 함께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와 별개로 퇴직연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고용노동부차관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면 수익률에 대해서 퇴직연금 수익률을 4.77%라고 그랬는데 실제 지난 5년 또는 지난 10년 퇴직연금 수익률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아마 퇴직연금에 따라서 DC·DB형이 있어서 그것은 세부적인 통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수익률이 실제 여기에서 표시하는 것하고 다를 거라고 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맞습니다.

○오기형 위원 약간 오해를 좀 유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가 퇴직연금의 기금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퇴직연금을 국가가 쓰겠다 절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맞습니다.

○오기형 위원 오히려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좀 낮다라는 비판들이 그동안 쌓였고 저희들 다양한 통로로 듣기로는 한 1%, 2%, 연수익률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복리 효과가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서 기금화 하자. 그래서 기금화하는 게 전체 투자의 전문성이 있고 그래서 수익률을 좀 높이면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 저희가 그런 문제식으로 퇴직연금의 기금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지난번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통

해서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가장 제도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점에서 이후에 연금특위 차원에서도 계속 논의를 좀 해야 되겠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다음으로 지금 이야기하실 분 중에 기재부차관보님께서, 아까 김남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맥락에 대해서 약간 달리 계속 논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 지점을 실제 구체적인 데이터로 사전에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출산 크레딧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출산 크레딧에 관련된 것 또는 그 크레딧 관련되는 것을 미리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오기형 위원**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출산 크레딧이라는 게 그 사유 발생 시에 국고로 부담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연금을 받을 때 국가가 부담하는 것보다는 실제 사전에 해야 지금 현재 국민연금 입장에서 그 자금이 투입되고, 자금 투입된 것을 토대로 해서 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운용 수익률로 해서 복리효과가 있어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문제인식으로 국정기획위에서 논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논리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뭐 수익률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 다른 코스트로는 저희가 출산 크레딧 관련해서 정부가 재정상 부담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또 코스트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크게 말씀을 드리면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성장률 3% 달성도 해야 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그 재원을 아직까지 적립금이 여유가 있는 국민연금에 또 쌓는 것보다는 어차피 빚을 내야 되는데 그 빚을 내는 부분을 AI나 성장에 더 도움되는 쪽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성장도 일으킬 수도 있고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또 이런 시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예, 그런 주장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그런 입장과 판단이 있다면 그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할 문제인 거지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이게 국채를 발행해서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 적절하니까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부채를 하는 국민연금에서 똑같은 부채를 부담하는 게 낫지 않는가인데 지금 국민들이 또는 청년들이 지적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재정 안정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해법으로써 크레딧을 미리 인식을 하고 그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처리하자라고 하는 그 주장 자체를 철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그 문제가 숫자가 다르다고 서로 다른 동문서답 형태로써 논쟁을 하고 있어서 이 지점에서 지금 투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그건 다른 설득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그 논의를 대부분 지금 국무회의에 통과시켜서 승인, 인정을 하고 있다면 아까 김남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 자체에 대해서 이걸 전혀 입장이 다르다라고 기재부 차관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인가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그걸 아까 말씀……

○오기형 위원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숫자에 대한 말씀을,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기형 위원 입장이 다르다고 이야기하셔서……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숫자가 다르고……

○오기형 위원 어느 정부 입장인지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대통령실이나 그 이후에 또 논의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 부분을 저희가 사후 지급하는 게 더 낫겠다는 정부 판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재부의 판단 아니고 정부 전체의 판단이었습니다.

○오기형 위원 이 주제는 이후에 계속 연금특위 차원에서 다시 논쟁을 좀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실 설득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다음 순서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입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 기재부 차관보님, 지금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시면 안 돼요. 출산 크레딧을 어느 세대가 부담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결국 어차피 정부가 나중에 추가 부담할 수 있으니까 사후 지원하겠다 이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생색을 냈습니다. 청년세대를 위해서 크레딧을 늘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전 지원은 현재 세금 내는 사람들이 부담을 하는 거고 사후 지원은 지금 청년들 그리고 청년들의 자녀세대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청년들 노후소득을 좀 더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비용을 청년세대와 청년의 자녀세대한테 떠넘기는 게 맞아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번에 우리 판단……

○김남희 위원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걸 청년들이 어떻게,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청년을 위해서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면서 비용은 청년세대와 청년의 자녀 세대가 내라고 그러면 이게 청년을 위한 거 맞아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그래서 세대 간의 불평등 문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재정 자동안전장치라든지 모수개혁이라든지 좀 큰 틀에서……

○김남희 위원 그런데 청년을 위한 제도라고 도입을 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출산을 제고를 위해서 도입했습니다.

○**김남희 위원**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 확대가 청년세대를 위한 거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다시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비용은 청년세대와 청년의 자녀세대한테 떠넘긴다 그러면 그걸 청년이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그래서 지난 연금개혁 과정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모두 같은 마음으로 크레딧 사전 지원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알고 계세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또 많은 추후에 논의가 있었고요.

○**김남희 위원** 앞으로 논의를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김남희 위원**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다면서 최소한 확대한 크레딧 지원 정도는 현재 세대가 부담을 해야지 그걸 미래세대와 미래세대 자녀세대한테 떠넘기면 그게 어떻게 청년을 위한 방안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출산 크레딧 사전 지원 과제 정리했다가, 지금 기재부 얘기하시는데 여러 논의를 해서 최종 반영 안 된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책임감 있는 해답을 좀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 세대 간 형평성 제고하고 청년들 가입기간 늘려 주겠다 약속하면 최소한 그 비용은 현재 세대가 부담하는 게 맞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님께 묻고 싶습니다.

연금특위가 재정 안정화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 보장 두 가지가 다 목표입니다.

○**김남희 위원** 국민들의 노후 너무 불안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OECD 최고의 노인 빈곤률입니다. 그리고 노인 빈곤률 때문에 그 노인의 자녀세대들까지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어도 빈곤의 악순환, 노후불안 문제 이제 해결해야 되지 않냐, 이것 때문에 연금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연금특위를 꾸린 것입니다.

재정 안정화도 필요한 과제지만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과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금제도를 논의하는 이유는 모든 국민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 저희가 연금특위가 21대 국회에도 있었고 그 연금특위에서 이 연금이야말로 국민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공론화 과

정도 거쳤습니다. 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연금개혁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노후소득 보장 그리고 노후소득 보장을 하기 위해서 재정에 대한 안정성 이 두 가지가 있었고, 노후소득 보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대적으로 공론화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청년까지 포함해서 다 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그런 보고는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남인순 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가 모수개혁의 방향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보험료율은 올리더라도 내 노후소득 보장도 같이 올라가야 되겠다, 같이 상승하는 방향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 방향에 따라서 국회는 논의를 한 것이고 그래서 모수개혁 방향이 보험료율이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소득대체율도 올리는 이런 부분으로 됐고.

그 당시에 합의했던 내용에서 자동안정장치를, 조정장치를 포함한 재정 안정화 방안 이렇게 김미애 간사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그때 논란이 많았어요. 이제 그 전체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마 장관님도 나중에 보고를 받으시면 아실 텐데 그냥 재정 안정화 방안에 관한 논의지 그것이 앞에 자동조정장치라는 워딩이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그때 저희 당에서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합의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연금특위에서 재정 안정화 방안을 얘기할 때는 이런 모수개혁도 있고 기금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의 재정 투입도 있고 다양한 방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문위원들의 얘기와 또 국민적인 논의가 있어야, 사실 그거에 기반해서 정부도 안을 낼 수 있지 지금 당장 정부가 재정 안정화 방안을 위해서 돈을 얼마나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부대로 보건복지부나 기재부에서는 연구를 해 주시고요. 또 국회는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논의를 하는 틀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서 갑론을박을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좀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당장 답을 갖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를 협의하셔서, 특히 기재부가 같이 협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미 국고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크레딧 지원 포함해서 지금 연금공단에 운영비 100억밖에 안 주잖아요. 이미 5000억을 쓰고 있는데 정액으로 100억밖에 지원을 안 해요. 이렇게 하는 나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에서 어떻게 국고들을 지원하는지, 뭐 크레딧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이런 방식도 있고 또 전체 비율로 지원하는 데 있고 다양한 외국의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료로 또 준비를 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석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말씀 주신 다른 나라의 국고지원 방식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 조사하고 기재부하고 좀 협의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복지부장관님, 이 대목인데요. 3페이지 하단에 ‘국고 지원’ 이거 신용평가사가 잘못 보면 국민연금 재정 지속안정 가능성 때문에 국고 지원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연금부채

계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 절대 써 갖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표현에 유의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표현 자체가 아니라……

자, 돌아가서 확인하세요.

유럽은페이 애즈 유 고(Pay As You Go)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그게 방식이 좋아서가 아니라 적립금이 다 소진돼서 나라가 한 번 망할 뻔하다가, 전 유럽이 재정 위기에 빠져서 우리나라 98년 외환위기 같은 그런 사달이 난 다음에, 인구 구조가 달라져서 그래서 그다음에 Pay As You Go 방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국고지원을 당연시한다는 것은 연금재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가재정에 문제가 번진다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제 일방 주장은 안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팩트기 때문에 이 연결, 히스토리에서 보셔야지. 제가 간혹 보면 ‘해외는 Pay As You Go로 하니까 우리도 Pay As You Go로 해. 하면 돼’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나라가 한 번 망했다가 한 거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나라 한 번 망하실 각오로 이렇게 써 갖고 다니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복지부장관님이,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런 의미로 쓴 건 아닌데요. 그렇게 비취질 수 있다면 정확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유럽의 경험을 다 파악을 잘 하시고요.

우리나라가, 저희 국민의힘이 모수조정에 대해서 합의한 거는 연금기금이 깎인다는 게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Pay As You Go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못 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합의해 준 거라는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이거를 쉽게 쉽게 국고 지원 이렇게, 그러니까 다층 연금을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건 노후 빈곤을 저희가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민연금 하나에 의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맞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렇지요? 퇴직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있고 기초연금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층 연금을 그렇게 강조했던 건데, 다층 연금의 취지라는 것은 하나에 덜 의존해서 안전하게 하자. 기금이 깎이는 것을 막자. 즉 자동안정조정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간의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운영하는 측에서 잘 전문성을 갖고 좀 체크해 주시고요. 계속 이거를 잘 파악하고 내용을 얘기하셔야 돼요. 알겠지요,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팩트 위주로, 역사적 팩트 위주로.

그리고 노동부차관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부가 걷는 게 국민연금, 공적연금이고 민간이 걷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퇴직연금 맞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맞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리고 지금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거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경쟁체제가 덜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미래에셋·삼성증권 이런 데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경쟁체제가 덜 들어가서……

저 1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 그래서 단순히 놓고 보면 국민연금 수익률에 비해서 퇴직연금이 낮아. 우리도 공단을 만들자, 저는 그거는 굉장한 오류를 가지고……

그러면 공단에 맡기면 지급보증 들어가야 됩니까? 논점이 변질 수가 있어요. 저희가 제도를 짜주고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가져가는 거고 그게 잘 발전해서 연금화되고 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다층 연금을 강조하고 퇴직연금 수익률을 강조했던 이유는 수익률이 높아지면 가입률이 좋아지고 그게 연금화돼요. 자동적으로 국민들이 그렇게 선택해 갑니다. 그런데 공단화한다는 자체는 국민연금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겠다는 뜻인지, 굉장히 변질 수가 있어요.

그 부분, 시장에서 다양한 금융전문가들과 얘기를 듣고 하시고 그냥 선불리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제가 충분히 전달이 됐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논의가 있고 정부가 아직 방침을 정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퇴직연금의 성격이 보면 생활보장적 성격과 함께 또 임금후불적인 성격도 있어서 되게 기존의 연금하고, 좀 다양한, 복합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우려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노사정 의견을 들어서 나중에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수민 위원 헌법상의 사유재산을 정부가 이전했을 때는 책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제가 하여튼 복지부장관님하고 노동부에 계속 체크를 할 테니까 잘 유념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배 위원 기재부차관보님, 지금 공무원연금 수급대상자이시겠지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박홍배 위원 그래서 차관보님의 노후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서는 기금운용 수익률이 몇 %가 나는지, 이게 원금보장형인지 또는 실적배당형인지 이런 데 대해서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지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그렇습니다.

○박홍배 위원 그러나 일반적인 퇴직연금 수급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DB형, DC형을 골라야 되고 DC형 중에서도 원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 채권형으로 하실지 주식형으로 하실지 IRP로 해야 될지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노동자가 바쁜 노동을 하면서 또 노동을 끝내고 집에서 쉬면서 이런 상품을 일일이 고르고 투자 리스크까지 평상시에 관리하고 이러는 게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장기 안정적인 투자 수익

을 좀 거뒀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국민연금 수익률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10년 평균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보니까 2.02%밖에 안 되더라. 이것 차라리 좀 모아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기금형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 기금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맞습니다.

○박홍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 공공기관형도 있고 그 공공기관형에는 퇴직연금을 정말로 별도의 공단을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연금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민간형이라고 했을 때는 그룹별로 할지 산업별로 할지 또는 퇴직연금 전문운용사 설립을 허용할지 이런 얘기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사적연금 제도개선 TF를 통해서 올해 연말까지 이런 방향들을 좀 결정하고 그러면 그렇게 설립되는 기금에 대해서 누가 관리를 할 건지, 감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더라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박홍배 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차관님, 대한민국의 퇴직연금 기금이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퇴직연금 기금이 지금 중퇴기금이라고 해서 저희 공단에서 하는 그런 형태가……

○박홍배 위원 중퇴기금이라는 퇴직연금 기금이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에는 퇴직연금 기금이 있습니다. 중퇴기금입니다. 그 적립액이 무려 1조 1687억 원입니다. 수익률이 8.73%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도, 시장에 있는 수많은 퇴직연금 사업자들도,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 삼성생명 이 많은 사업자들이 달려들어서 시장을 나눠 먹고 거기서 수익률을 올리지 못하는 것을 떠나서 규모의 경제를 한번 실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맞습니다.

○박홍배 위원 퇴직연금 기금을,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된다고 해서 삼성그룹에 있는 임직원들의 퇴직연금을 민간기관으로부터 다 뺏아서 그 기금에다 맡깁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홍배 위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준 위원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좀 전에 드렸던 질문에 연결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처음에 우리 재정안정화 방안 관련해서는 이게 결국 고갈 문제잖아요. 연금의 고갈이라는 게 지금 상태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기금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재정을 안정화시킬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전문가와 앞으로 논의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별로 논의가 안 됐습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작년 9월에 정부가 안을 제출할 때는 자동조정장치나 이런 걸 포함해서 제출을 했지만 연금특위에서 논의하면서 우리나라 빈곤율이 너무 높다라는 그런 얘기로 그것은 추후에 논의하는 걸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다양한 수단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도입하면 어떻게 변동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시뮬레이션해 보고 의견 듣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고 아마 그 사회적 합의를 하는 데가 국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재준 위원** 이재명 정부에서 신속하게 123대 국정과제 이렇게 해서 막 책자도 발간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논의를 별로 안 했다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아주 구체적인 그런 세부……

○**우재준 위원** 왜냐하면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 만약에 좀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했으면 그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정부가 이미 만들어지고 본인의 국정과제까지 다 발표하고 그대로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안이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정부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 의견이나 사회적인 합의 이런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재준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국정과제 발표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124대 하면 되잖아요, 일이삼 숫자 굳이 집착하지 마시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지금 연금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국정과제에 세부 내용으로 들어 있고요. 좀 더 큰 틀의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러니까 시간을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여러 가지……

○**우재준 위원** 연금특위가 원래 12월까지로 돼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 날짜는 알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지금 이미 10월인 것 알고 계십니까? 이제 9월 말이지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언제까지 과연 그 방안을 낼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몇 달 안에 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재준 위원**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 123대 과제들은 굉장히 쉬운 과제라서 이렇게 쉽게 쉽게 발표를 하셨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실행가능성을 가지고서 5년 계획을 만든 상황……

○**우재준 위원** 다른 내용은 많이 발표를 하셨어요. 보면 연금 관련해서 오늘 책자도 이렇게 가져오시고 업무보고도 가져오시고 많이 가져오셨어요. 다른 부분, 검찰개혁 이런 것들은, 국가적으로 엄청 중요한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쉽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연금은 그렇게 어렵나요, 재정안정화 장치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전문가 의견을 모아서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장관님 저는 상당히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황당하거든요. 지금 저 뒤에 진영주 연금정책관도 있고 이스란 1차관도 있는데 설명을 들었을 것 아니에요?

제가 구태여 우리 당에 저보다 더 뛰어난 연금전문가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간사를 하나면 협의 과정에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마 정쟁을 좋아하는 어느 정당처럼 했다면 안 합니다, 합의를. 그러나 연금 고갈시기는 당장 30년 후 아니면 그 전에 다가오겠지요, 출산율이 더 떨어진다면?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김미애 위원 그리고 장관님은 금과옥조처럼 운용수익률 제고라고 하는데 그게 더 나빠진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를 올리는 것 이것은 정말 해야 되겠다. 그런데 소득 대체율까지 올리면 당연히 재정건전성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반 발짝이라도 나아가자는 마음에서 했는데 그런 것 전혀 무시하고 질문하는 위원들마다 답변을 조금조금씩 달리 말하는데 이걸 좀 보세요.

그리고 지난해 진영주 국장님, 그때 보건복지위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조문 제목을 재정안정화 하고 내용을 자동조정장치로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그때 가지고 왔습니까, 안 가지고 왔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러니까 2023년 9월 제출한 정부안을 말씀하시는……

○김미애 위원 아니, 올해도 있었어요, 올해도. 제가 그걸 다 가지고 있던 말이에요. 하도 거짓말을 자주 하고 말을 바꾸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고 그때그때…… 이날도 당초에는 재정안정화가 아니라 자동조정장치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논란을 만들지 말자라고 해서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재정안정화 조치로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것을 타이핑을 한 것까지 제가 그 자리에 다 있었는데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특위가 왜 구성됐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재정안정화 조치, 지속가능성 담보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동조정장치, 이것 말고 핵심적인 게 있습니까? 오늘 복지부가 보고했는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수익률 제고, 국고지원, 하나 마나 한 말을 하잖아요. 핵심적인 것 하지 않으면 다 무책임한 거예요. 그것 누가 못 합니까?

그리고 제가 2030한테 욕먹을 각오로 지금보다도 소수당으로서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고 싶은 마음에서 한 거고 그 뒤로 반대 여론이 높고 50대 이상이 찬성 여론 높은 것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김미애 위원 장관님은 인기 있는 것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장관 하신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장기재정안정화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금 특위에서 자동조정화 장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미애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이 합의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근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복지부에는 그 공무원들이 계세요. 그때 같이 논의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시고 입장이 바뀌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저도 국회의원 안 해도 좋으니까, 저는 이 나라의 미래세대에게 빚더미를 넘겨 주는

그 정치인이 안 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 사명감 없이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장관으로 들어오셨을 때는 그 정도는 각오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저도 그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김미애 위원 하나 마나 한 그런 보고는 이제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러니까 다양한 수단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동조정장치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기에 적용할 거냐에 따라서도 국민들의 의견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애 위원 2004년에 일본이 했던 걸 한번 살펴 보십시오. 일본은 100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되게 그렇게 자동조정장치가 설정돼 있습니다. 잘 보고받으시고 제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오기형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 저희가, 오늘 이 논쟁은 정당이 달라도 다양한 의견이고 그걸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저는 기재위상임위할 때도 박수민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거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하시는 게 실제 논쟁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옳고 그름을 그냥 흑백논리로 바라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 종래에 논의들이 쌓여 왔던 것들이 있고 연장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모수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님이나 그 당시에 했던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큰 결단을 여야 간에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저쪽에서 비판을 받았지만 지금도 그런 정신으로 앞으로 또 구조개혁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것 중에 국고지원에 대한 의견인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르지만 그렇습니다. 국고지원 관련해서는 이미 모수개혁을 하면서 법에 지급보증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결국에는 국가부채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쟁을 하는 그 청년세대나 현세대나 이 논쟁의 포인트는 그 부담을 현세대가 질 거냐, 미래세대가 질 거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기금의 지속가능성에 이어서 이 국고지원을 하면 국가채무가 늘어나냐 마냐. 저는 이 논쟁은 포인트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어찌 되었든 국가가 부채를 지는 거고 책임을 지는 건데 그런데 이걸 미래세대가 질 거냐, 현세대가 조금 더 질 거냐 이 지점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우려를 덜어 주면서 현세대가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저는 청년세대의 비판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노후소득보장인데 그걸 자동화 장치를 바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노후소득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논쟁이 거꾸로 되지 않습니까? 존재 이유가 노후소득보장인데 노후소득의 보장, 일정 소득 대출 안 되더라도 그냥 무조건 조정하자 그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일정 수준을 전제로 해

서 그럼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가 초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상 이야기하는, 어떤 분이 416 방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요율을 4% 올려야 된다, 지금 이미 모수개혁해서 한 번 올렸고 두 번째로 수익률을 6%까지 해 보자. 지금 현재 6% 하고 있으니깐 이게 안정적으로 해야, 종래에는 4.5% 기준으로 했지만 6%까지 해 보자. 세 번째는 GDP 대비 1% 정도의 국고지원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 이후가 국고투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국고투입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냐에 대해서 아까 기재부차관보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국가를 지금 당장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의무지출 자체가 쉽지는 않고 또 당장 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깐 그 고민이 있다는 그 자체가 틀렸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서로가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지점에서 국고투입의 방법 중에 하나가 크레딧에 대해서 금액을 좀 뺏겨 보자 그리고 현재 풀 수 있는 구조조정 관련해서 지금 보건복지부 입장이 있지만 그 입장이 기재부랑 협의하는 거에서 다 막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이 논의의 부분이 여기 보건복지부와 논의할 주제가 아니라 기재부와 관계에서 우리나라의 의무지출 구조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가, 어디까지 결단할 수 있는가 그 시나리오를 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께 논의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지점이 좀 막히고 있어서, 물론 정치권에서 무책임하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의무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기초연금 같은 지금 26조, 나중에 한 150조까지 간다는 건데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그런 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면 우리가 한번 다른 결단도 해야 되는 거지요. 그걸 다시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풀어 갈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지적도 함께 책임지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새 정부 들어서 첫 현안질의하면서 논의하는 거지만 이 문제의식에서 실은 국민의힘 위원님들이나 진보당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것이 맥락이 그렇게 큰 차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선택지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또는 의무지출 구조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선택지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느 수준까지는 답을 좀 만들어 내려고 우리가 좀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재부차관보님, 한번 의견을 좀 더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오기형 간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박수민 위원님이 강조하셨던 것처럼 노후소득보장이란든지 지속가능성 문제는 연금체계 전체를 다 보고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될 같습니다.

다층적으로 우리가 노후소득 보장체계 이 체계 내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한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게 가장 큰 목표가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의무지출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또 그리고 국민소득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 국가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지 어느 한쪽만 보고 답을 내기에는 저

회가 부딪치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복잡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요구 하나만 좀 말씀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윤영석 박수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 금융위원장님, 이 주택연금 개선 방향 상당히 반갑고 좋은 내용 검토하셨는데요. 좋게 평가드리고요. 이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나 아니면 저희 의원실로 별도 보고 한번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금융위원장 이익원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 저한테도 좀 같이 보고해 주세요.

○금융위원장 이익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김미애 위원님, 김용태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박홍배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해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10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간자문위원회 구성과 함께 정부 측의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지적된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충실히 검토 보완해서 추후 연금특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드린 민간자문위원회 구성과 앞으로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를 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서 추후 회의 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또 보좌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강선우 김남희 김미애 김용태 남인순 모경중 박수민 박홍배 오기형 우재준
윤영석 전종덕

○출장 위원(1인)

김재섭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 정경윤

전문위원 오세일

전문위원 한석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차관보 윤인대

경제구조개혁국장 주환욱

재정정책국장 장문선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남경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연금정책관 진영주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

노동정책실장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 최관병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자본시장국장 박민우